

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대·내외 경제 여건

□ 세계경제 : 하방리스크가 확대, 내년에 회복세 예상

- 세계경제는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,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 전망
 - 미국은 재정정책 여력 소진, 무역분쟁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
 - 유로존은 독일 경기 부진,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
 - 중국은 무역분쟁, 구조개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나,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이 일부 보완 예상
- 美中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장기화,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 요인 혼재

□ 국내경제 :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 상존

- 확장적 재정,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, 투자 수출 부진 등 불확실성 상존
 - * 성장률 전망(%,' 19→' 20년) : (OECD,' 19.3월) 2.6 → 2.6 (한은,' 19.1월) 2.6 → 2.6
 -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인력,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하락도 우려
-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경기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

2. 국가 재정운용 방향

□ 재정운용 기본방향

□ 혁신경제 도약,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위해 적극적 재정 운영

-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정 운영
- 규제, 금융, 세제 등 다른 정책수단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

□ 경제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

- 소비·투자·수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
- 혁신을 통해 '추격형→선도형 경제' 전환을 본격화하여,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

□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

- 기초생활보장 강화,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
- 돌봄·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여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확충
- 안전, 환경보호,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-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, 국가-지방 간 기능 조정 등으로 합리적 재정분권을 구현

□ 재정여력 활용 및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

- 안정적 재정수입 기반 강화, 특별회계·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, 민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 확보
- 주요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으로 우선 충당

□ 자원배분 중점

□ [활력이 꿈틀대는 경제]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- 상생형 지역 일자리,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·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·지원 강화
- 청년·중장년·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
- 생활밀착형 SOC, 노후 SOC 안전투자,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
- 스마트산단 조성, 스마트공장 보급·고도화 확대, 산업군별 맞춤형 R&D·사업재편 지원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
- 신북방·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, 수출바우처 확대·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, 건설·플랜트 해외 수주 등 수출지원 강화
- 서비스산업 전반(문화·보건·콘텐츠·물류 등)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, 외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소비·관광 활성화
- 재정분권,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규제자유특구 내 신전략산업, 도시재생, 농산어촌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 및 혁신지원

□ [내 삶이 따뜻한 사회]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

- 기초생활보장 강화, 기초연금 확대,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·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
- 실업부조 도입,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, 직업훈련 혁신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고용안전망 체계 확립
- 아이, 어르신, 장애인 등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
- 고교무상교육 실시,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,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여 차별 없는 출발 기회 제공
- 소상공인 창업전 교육, 판로 확대, 협업화·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으로 소상공인·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지원
-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, 생활체육활동 기반 마련 등으로 휴식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

□ [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]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

- 4대 플랫폼(수소, 데이터, AI, 5G), 8대 선도사업(바이오헬스, 스마트팜 등)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, 주력산업·서비스업의 신기술 융합 지원

- 신산업·高科技 스타트업 발굴, 스케일업 지원,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-성장-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보강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
-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, 고위험 혁신형 R&D 등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&D 지원
- 고급 인재(인공지능, SW, 바이오, 의과학 등), 현장실무형 인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
- 신혼·출산가구 주거지원, 임신·출산 의료비 경감,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응 투자 확대
- 노인일자리 등 노인소득 보장 강화, 치매전담형 요양시설·스마트돌봄시스템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

□ [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] 안전한 환경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

-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, 친환경차 보급 확대,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
- 노후 기반시설(도로, 열수송관, 가스배관 등) 안전 점검 및 개선, 유해 화학물질·생활주변 방사선 관리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
- 고위험 감염병 대응, 필수 의료인프라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
- 자살예방·산재방지·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원 강화
- 남북간 교류·협력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,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뒷받침
-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, 병영 시설·장비 첨단화 등 스마트 軍 육성 및 핵심·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으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

⇒ 이러한 4대 자원배분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, ①국민편의증진 인프라,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·집중 투자

3. 중기 지방재정 여건

[인구]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· 고령화

- (총괄) 저출산,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, 고령화 가속
- (재정 여건) 세입 약화, 고령인구 증가로 지출 부담 확대
 - (수입측면)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며, 특히 농촌 지역에서 세수감소 경향이 크게 나타남 → 재정양극화 심화
 - (지출측면) ' 28년까지 인구 증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 → 재정지출 확대 추세 유지, 특히 고령화는 복지지출 증가요인
 -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

[산업] 주요 수출업종 위축, 산업구조 변화 전망

- (총괄) 반도체 가격 하락,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,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업 중요성 대두
- (재정 여건) 지역 신성장 산업 유치 · 발굴을 위한 투자수요 확대
 - (수입측면) 일자리 감소, 소비 위축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, 세외수입 감소 등 수입 여건 악화 우려
 - (지출측면)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공장 · 연구소 등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수요 증가

[재정분권 확대] 재정 운용 자율성 · 책임성 확대

- (전망)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강화, 중앙권한의 지방이양, 재정분권 등 추진 → 지방자치단체의 권한·운영수단·책임 확대
- (재정여건) 지방세 증가로 자체재원 확대 전망
 - (수입측면)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*,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으로 자체재원 증가, 균특회계 등 이전재원의 일부 감소 예상
 - (지출측면)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추진 등으로 지방의 사무가 확대되어 자체사업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복지확대)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

- (전망)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*로 4대 핵심분야(고용·소득·건강·사회서비스) 보장 확대
- (재정여건)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, 자체사업 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
 - (국고보조사업) 기초연금,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 확대
 - (자체사업) 출산 지원, 노인 사회서비스 확충 등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사업 추진 → 유사·중복 사업 정비 필요